

Direction for the Supply of Elderly Welfare Housing in Korea

한국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공급방향

권순정 (아주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Kwon, Soonjung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두 가지 파고를 동시에 맞고 있어 향후 사회의 안전망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두가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국사회의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노인복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급증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국가적인 재원이 급속하게 소모될 전망이다. 따라서 노인 복지서비스의 요체는 어떻게 하면 노인을 포함한 국민들의 복지만족도를 높이면서 복지비용을 줄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노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노인복지법에 제시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 기관 등이 있다.

최근 정부는 노인인구의 급증과 이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서비스의 요구 증대를 고려하여 노인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왔다. 2005년 기준 노인인구에 대한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정원비율이 1.7% 이던 것이 2010년 4.8%로 급증하였다. 2005년 기준 유럽 및 일본 등 고령사회를 경험한 국가들의 노인시설 공급비율이 5%~12%인 것에 비하면 아직도 한국의 노인시설 공급비율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다만 2005년 일본의 노인시설 공급비율(4.4%)과는 비슷한 수준이며 특히, 2010년 한국 노인인구비율(11.0%)과 비슷한 1988년 일본(11.3%)과 비교하면 한국의 노인시설공급비율(4.8%)이 일본(1.8%)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최근 한국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요양병원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어 이들 시설공급에 대한 완급조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설수준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 노인시설의 침실 및 병실은 아직도 4인실 등 다인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1인실 위주로 노인시설을 구성하고 있는 서구 및 일본에 비해 거주자의 프라이버시가 좋지 않은 측면이 있다. 장기요양종사자의 측면에서도 한국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노인인구

에 대한 장기요양증사자의 비율이 매우 적고 간호사 등 전문인력의 비중도 낮다. 한국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 공급량 증대뿐만 아니라 시설의 질과 장기요양인력의 확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한국은 노인복지시설을 시급히 확충해야하는 것은 자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이 노인의 3대 고충인 경제적 빈곤, 낮은 건강수준, 사회적 소외등을 최대한 비용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게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의료시설보다는 노인주거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최근 서구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aging in place(거주지 노화)의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노인의 건강상태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노인들이 거주지를 여기저기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악화되어도 자신이 살아왔던 거주지와 지역공동체내에서 노인들이 최대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가 있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외된 노인들이 일반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 등의 개발과, 고령자주택개조지원 나아가서는 고령자들이 지역공동체내에서 지속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고령친화도시의 준비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지역 공동체 내에서 출산, 성장, 노화, 장례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생활공동체의 구축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와 성인, 노인들이 더불어 생활하고, 삶과 죽음까지도 일상적인 생활의 범위로 끌어들이는 것이 미래복지도시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어느 한 부처가 아닌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가 모두 국민복지의 방향 및 지원책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다.